

# “기초학력 강화부터 IB교육·특수학교 신설까지 이끈 대변혁”

## 교육이 미래다

### ‘조희연표 서울 교육 11년’ 핵심 키워드 공존·혁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로 11년차를 맞으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014년 첫 취임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내년 고교 3학년을 끝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다. “혁신 미래 교육으로 21세기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첫 취임을 알렸던 조 교육감은 3선을 거치며 ‘공존’과 ‘혁신’으로 목표를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다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기초학력 양극화가 교육계 난제로 꼽히는 가운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공존과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 ◆ ‘기초학력’ 전담과 신설... 10여 년 재임 기간 특수학교 4개 신설 추진

3선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첫 일성은 기초학력 보장이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두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견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전담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학습과 기초학력진단·평가·분석 기능을 통합한 모습이다.

#### 기초학력 저하 해소위한 교수학습 문해·수리력 중심 진단검사 도입 공립4개·사립1개교 특수학교 신설 서울교육소통광장 플랫폼 운영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시행한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 기초학력 진단검사’에도 조 교육감의 학생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개교, 약 4만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교과 학습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된다.

장애 학생 학습권 확보를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나래학교 개교를 시작해 2020년 3월 서진학교를 개교했고, 현재는 중랑구 신내동에 (가칭)동진학교를, 성동구에는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명수학교가 서울다윈학교로 전환됐으며 2017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서울효정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년 간 공립으로 전환된 2개교를 포함해 공립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해 7월 교육감 제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4개교, 사립1개교 등 총 5개 특수학교가 서울 관내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2029년 3월 성진학교가 문을 열면,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에 이어 동진학교, 성진학교를 포함해 조희연 교육감 재직 시에 4개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 ◆ “시민 제안, 정책에 반영”... 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교육소통광장’

올 초에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소통광장’을 개통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다.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묻고 응답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정책설문은 서울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 현황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돼 응답자 수와 응답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2일 기준 서울교육소통광장에 올라온 시민 제안은 130건으로,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독서캠페인 ‘북웨이브’와 관련한 제안 글이 다수 게재됐다. 제안 글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2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소관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봉 후 반기가 채 지나지 않아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여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토론·체험’ 중심 IB교육...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전국 확산

바칼로레아(IB)교육은 세계와의 ‘공존’에 더불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토의와 토론,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며 논·술형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어 강의식 교육과 객관식 평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IB 열풍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첫 IB 정책연구에서 시작해 2019년 대구와 2020년 제주에서 공교육 도입을 시행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제1기 참여 학생이 지난 2021년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유학 유튜브 리틀 포레스트 캡처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관내 IB교육의 초석이 될 IB탐색학교 31곳을 지정해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인 KB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IB교육은 진보교육감대표 교육정책인 ‘혁신교육’과 공통점이 많다. 교사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다. IB교육은 이에 더 나아가 객관적 평가 틀이 마련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혁신교육’을 보완한다는 평가도 있다.

IB교육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현재 대학입시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IB 수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 ◆ 폐교 직전 학교가 ‘복적복적’... 농촌유학, 3년간 누적 1050명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조 교육감의 핵심 정

책 중 하나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정책이다. 과밀학급과 경쟁 스트레스에 지친 서울 학생은 자연을 경험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유학을 시작한 후 2022년 전라북도,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 유학 지역을 확대했다. 2021년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전남 구례 중등초등학교가 현재 경쟁률 2대 1의 학교로 변화한 점은 농촌학교 프로그램이 보여준 긍정적 사례 중 하나다.

#### IB교육, 객관식 평가 등 대안 주목 지난해 IB탐색학교 31곳 지정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농촌유학 확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도 지속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듯 했지만,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두 가지에 근거해 시행됐다.

최장수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과정은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1학기 235명에서 이번 1학기 305명으로 30%p가량 늘어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최대 1년인 유학 기간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간을 연장할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누적 1050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을 경험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공존과 혁신’의 정책 관련 이미지.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美,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제출... “이-팔 3단계 휴전안 지지 촉구”  
▲ 英 노동당 “핵무기 사용 준비해야... 집권하면 핵잠수함 건조” /사진 뉴시스

▲ ‘오스트리아 첫 여성 총리’ 비를라린 별세... 향년 74세  
▲ 긴장 감도는 중국 6·4 텐안먼 35주년... 성루·지하철 출구 폐쇄



▲ 중국 청소년 형사책임 14세에 12세로 하향 추진  
▲ 라이칭더 대만 총통 6·4 35주년 “독재에 자유로 대응해야” /사진 뉴시스